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연간 71억원 보증재원 추가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하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보의 보증잔액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타 보증기관 대비 높고 있으나,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현저히 낮은 0.04%를 적용하고 있어 출연요율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종관 전북신보이사장은 지난해 7월 민생부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재단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8%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하며 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급변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향은 유지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 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0.04%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실제 출연요율을 기본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연요율을 재산정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실제 출연요율이 0.03%

(0.04%→0.07%)인상될 경우, 전북신보는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이 매년 약 71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연간 2천7백개의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관 전북신보이사장은 "이번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그간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노력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든 임직원의 결실이다. 급변 출연요율 인상으로 보증재원이 확보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에게 가문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진청,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국산 반려동물 사료 품질 제고·시장 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 위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농진청은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그동안 농진청은 주요 원료 사료에 대한 영양소 이용성 평가, 반려견 품종별·생애주기별 기초 영양생리 차이 구명 연구 등을 추진, 현재 국외 영양표준

자료와 국내 연구 결과를 수집해 국제 수준에 기반한 영양표준 초안을 설계하고 있다.

가구 수는 약 602만 가구로 집계돼 지난 10년 사이 68% 증가, 연관 산업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시장 규모는 1조3,329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려동물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국외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와 반려동물 사료산업 연관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사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에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 및 생산 기술 발전으로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산 사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전주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주시 소재 제조·유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홍보 △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기반조성과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온라인 SNS 마케팅 등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항목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수출 종합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지원사업에 전주시 기업 8개 업체가 선정돼 외국어 홍보 카탈로그·홈페이지 제작, 해외 전시회, 현지 온라인 SNS 마케팅 등을 지원받아 16만 달러(USD)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전주 방산기업 현장 방문

신기술 적용 제품 방산시장 개척 애로사항 청취·해결책 마련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30일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쉼데크카본(대표 우종인)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민·군 항공기 브레이크에 관한 국산화 핵심기술 개발 및 국내·외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크카본은 방위사업청에서 지정된 83개 방산기업 중 하나이며, 군수용 항공기 및 민·군 겸용 수송기의 탄소 복합재를 적용한 브레이크 디스크 생산 기업이다. 현재, 5종의 군수 항공기에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되

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참여해 2종의 고도화된 브레이크 디스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국내 군수 항공기 생산량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세계 지경학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보다 해외시장 판로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방위산업 특성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체계중합 기업을 대상으로 전북도의 역할을 더 찾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전북도 2024년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인 만큼 방산기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 7월 방위산업팀을 신설했고 국방관련 기업지원 기관인 전북국방벤처센터 및 전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혁신기관과 협업하여 방산기업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

/김재훈 기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30일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쉼데크카본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 용역 5건 발주... 4억 투입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5건의 정책연구 용역(4억 400만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용역은 △새만금 식품허브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기본구상(1억 3400만원) △컨벤션 허브 조성 위한 기본구상 연구(9000만원) △새만금 산단 복합환경기초시설 설치 방안(6000만원)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방안(4000만원) △공공매립

지 공급 및 가격 안정방식 개선(8000만원)이다. 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

된 제도를 분석해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 위한 인센티브(특전)의 연구를 추진한다.

또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 처리장을 포함하는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뉴시스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추진

농어촌소 전북본부, 고령농업인 소유농지 매도시 1ha당 월 50만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조건 부담제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도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은 노후 생활 보장,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농업의 적극 대비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t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